제 7 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4. 재난재해 관리
5.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지행정 구현
6. 영산강 살리기 추진
7. 공동혁신도시건설

제7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 활성화

가. 주요 SOC시설의 획기적 확충

(1) 도로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말 88올림픽 고속도로 및 장성~담양간은 2006년에 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고창~장성, 2008년에는 무안~광주간을 개통하였고,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은 공사 중에 있다. 또 광주~완도간은 2005년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09년 12월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도 4차로 개설사업은 국도 77호선 등 미개통 구간과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화원~삼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9지구와 유치~이양간 등 지방도 42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시·군별로 군도·농어촌도로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 2-350>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

구분 / 도로별	2008		2009		2010	
	연 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112	68.6	10,181	89.9	10,271	69.3
고속도로	208.3	100	267	100	271	100
국 도	2,015	94.4	2,026	94.7	2,004	94.8
지 방 도	2,293.4	70.1	2,295	70.5	2,303	71.7
시 군 도	5,596.2	60.8	5,592	59.1	5,693	61.7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표 2-351> 사업추진 실적(2010년)

(단위 : ㎞,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총	229	204.5	16,446
고 속 도 로	3	37.5	7,239
일 반 국 도	36	30.4	3,90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14	12.0	2,845
국 가 지 원 지 방 도	9	8.1	866
지 방 도	42	12.5	834
군 도	40	37.0	342
농 어 촌 도 로	85	67.0	417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도로계획담당 양종연, 담당자 양시봉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 철도신설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과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 12월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고,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 완료 및 경제성(B/C 1.04)이 인정 되어 2003년 12월 2개 공구 17.5km가 턴키공사로 착공되었고 2018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잔여 5개 공구 62.0km는 기타공사로 발주하였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669억원 공정율 5%이며, 2011년에는 시방서 및 설계기준 변경 등 보완설계로 10억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광양~목포간 수송거리가 153.0㎞에서 79.5㎞로 73.5㎞가 단축되고 수송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되어 전남 서남부지역과 동부 지역간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352㎞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도 1999년말 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다.

2003년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 기본계획고시, 2008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Ⅰ단계 구간인 오송~광주 구간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Ⅱ단계 구간인 광주~목포 구간은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1년 2월말 완료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노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노선선정 고시가 6월말 정도 발표되어 2017년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전라선 복선 전철화

신리~동순천간 122.6㎞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광양만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198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89년 11월 1단계 공사(병목구간 64.3㎞)를 착수하여 1999년 9월 완공 개통하였고, 2단계구간(기타 구간 58.3㎞)도 1998년 6월 착공 후 완료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다.

이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도 2001년 12월~2004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05년 7월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선전철화가 완료되면 KTX 운행은 물론 수송능력 향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천~여수간 40.0㎞에 대해서는 3개 공구로 분할, 성산~신

풍간 1공구와 여천~여수간 3공구는 2002년 턴키공사로 발주되었고, 신풍~여천간 2공구는 20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였으며, 2007년 전철화 설계 후 2011년 11월경 전철화 개통을 목표로 현재 93% 공정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계획기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철도공항담당 백창환, 담당자 이원형

(3) 공항 건설

1) 여수공항 확장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 율촌 1·2산단 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998년 8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1999년까지 1,022 필지에 대한 보상비 44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1998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 신설 활주로와 관제탑을 완공하고 2005년 11월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을 완공, 동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여수공항 확장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등과 육상교통이 불편한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항공교통수요 처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활주로 추가확장이 이루어지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한려해상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 건설

대불·삼호산단의 활성화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호남권의 중심거점 공항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1998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1998년 12월 설계

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을 채택, 1998월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1월에 준공과 함께 개항되었다.

본 국제공항 완공으로 호남권 거점항공수요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중 교류확대, 서남권 투자활성화, 농산물 수출 여건개선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철도공항담당 백창환, 담당자 이원형

(4)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7년 12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호남복합물류(주)를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000년 실시설계와 2002년 용지매수를 완료한 후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5월 1단계 74천평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84천평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물류체계를 단순화 내지 집약화 시킴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지방세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철도공항담당 백창환, 담당자 이근교

나. 건설업체 등록관리

2010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981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006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352>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추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일 반	975(감1.5%)	998(증2.4%)	981(감1.7%)
전 문	3,780(감0.7%)	3,909(증3.4%)	4,006(증2.5%)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설업체 자진반납 등으로 지난 1999년 등록제로 전환 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건설업체가 2002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고 최근 F1코리아그랑프리, 2012여수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4대강 사업 등 대형공사에 정부예산이 집중되어 신규사업이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시장 여건이 열악하여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또는 과다한 경쟁이 예상되어 업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등을 강구한다면 한층 더 성숙된 건설산업 발전과 부실공사 예방이 기대된다.

<표 2-353> 2010년도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372업체	39	251	82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기준 미충족에 따른 등록말소가 39개업체, 영업정지 251개 업체(등록기준 미달 등)이며 하도급계약 발주처 미통보 등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82개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건설정책담당 유영걸, 담당자 황경혜

다. 건설기계관리

도내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시정 함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의 1/3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354>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23,951	159	9,146	1,076	6,925	3,512	590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	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25	294	1,377	271	65	39	6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및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20	176	240	11	1	10	8

<표 2-355>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현황

(단위 : 업체)

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소계	일반	개별			
639	451	270	181	108	42	38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대중교통담당 김태형, 담당자 이병래

1-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권 287.11㎢를 1973년 1월 17일 지정관리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2001년 5월 3일 나주 학림마을 등 경계선 관통취락 3개소, 0.045㎢를 해제하고 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 10.40㎢를 2004년말 해제하였으며, 2006년 12월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성진원·남면일원 0.807㎢를 해제하고 2009년까지 해제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4.128㎢를 해제하여 2009년 12월말 현재 271.730㎢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2-356>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단위 : ㎢, 가구, 명)

구분 \ 시군		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면적	당초	287.11	42.9	115.18	41.70	87.33
	현재	271.73	39.536	108.677	41.230	82.287
가구	당초	10,127	2,331	4,415	354	3,027
	현재	363	36	180	13	134
인구	당초	26,196	5,682	11,602	965	7,947
	현재	1,720	229	799	37	655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 단속요원 84명, 단속장비 44대 등을 투입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계표석 3,186개소, 초소 20개소, 입간판 11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 등은 집단취락이 해제됨에 따라 2010년까지 665백만원(국비50%,시군비50%)을 투입하여 해

제지역에 대한 표석 이전 및 보수를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나주시 등 4개 시군에 국비 415억원과 시·군비 163억원 등 총 578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도로정비 등 251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 국토부, 도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0년도에 3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조치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경관도시계획담당 박철웅, 담당자 이범재

1-3.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

가. 효율적인 택지개발 사업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택지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3종의 사업으로 총 76지구 36,436천㎡, 투자사업비는 3조9천억 규모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 개발사업 23지구, 도시개발사업 2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3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 구분하면, 사업완료가 61지구 23,887천㎡, 추진중인 사업은 15지구이며 추진중인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사업 3지구, 도시개발사업 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지구로서 주택용지 수용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지역개발담당 최봉현, 담당자 염승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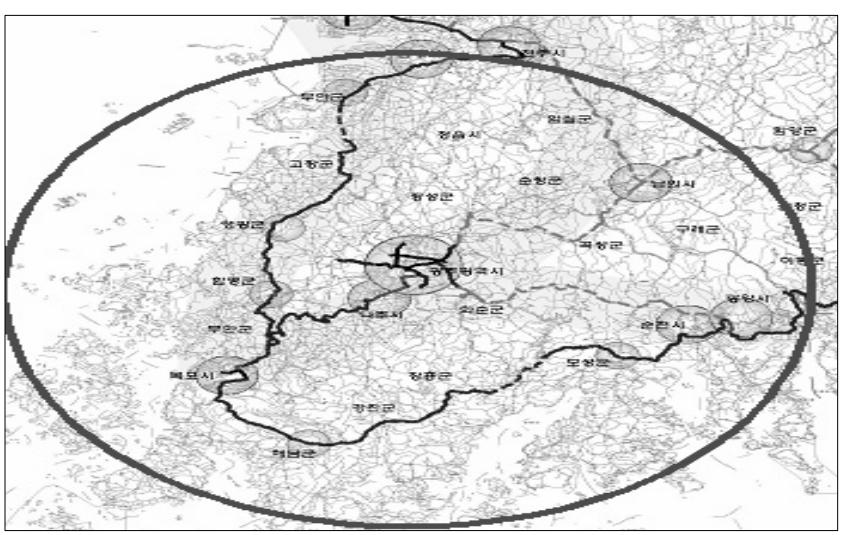
나.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

(1) 자전거 도로사업

정부에서 추진 중인『녹색성장』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 중인『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10~'19)』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시행년도 2년차 사업으로 순천 등 5개 지역 24.2㎞구간에 걸쳐 110.96억원을 투입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2010년 7월 8일 확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목포, 순천, 광양, 보성, 영암 등 도내 12개 지역 267km 구간에 대해 1,25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지역개발담당 최봉현, 담당자 이종현

다. 국토계획의 페러다임 변화

(1) 도시계획분야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연접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군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목포·여수·순천·광양시와 담양·곡성·구례·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 20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2011년 상반기까지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로 개편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투자유치와 관광단지 조성 등 토지규제완화를 위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23회 개최하여 총 83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였다.

(2)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에는 광주권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키로 심의의결 됨에 따라 당초 해제가능면적 20.719㎢의 30%인 6.214㎢를 추가 해제가능면적으로 확보하여 총 26.933㎢중 15.380㎢를 해제하고, 잔여면적 11.553㎢를 개발수요에 따라 해제할 계획이다.

광역시설로는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계획과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 등이 반영되어 있다.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 시키고 전주~여수 간 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고 3개 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하였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 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이전, 기업도시와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을 2025년 9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국비지원을 위하여 다도해 특정지역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반영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 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하였으며

면급 도시 내 사유토지로서 급경사지에 결정되어 사실상 조성이 어려운 어린이 공원은 폐지하고 시군 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또는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 검토하였고

2010년 12월말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42천㎡에 86억원이 청구되어 32천㎡를 35억원을 투입 매수하였으며 잔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매수여부 결정 후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경관도시계획담당 박철웅, 담당자 박필영

1-4. 전남의 산업기반 현황

가.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여수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양제철 등 광양만권에 산업 생산성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이 전남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체수의 8.0%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30.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치산업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공해유발, 제조업종의 단순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의 중화학공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양만권은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화 형태가 대부분이나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단이 활성화되어,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간척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가 완공되고 대불산단~삼호산단간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선 복

선화(송정~목포), 무안 국제공항 건설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주변 발전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도 있어 낙후된 이 지역이 물류 산업과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과 전남 전지역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광주시에 비해 지가가 싸고,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의 입지여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나. 산업단지조성 현황

전남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 여수오천,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5개 시군에 22개소가 있다.

<표 2-357> 전남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10. 4분기)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A)	분 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합 계	27개소	224,801	97,763	72,092	67,974	4,040	94.3	
국가산단	5개소	173,932	65,069	56,709	56,264	445	99.2	
영 암	대 불	20,887	8,269	8,269	7,824	445	94.6	
광 양	광 양	96,405	26,167	20,830	20,830	-	100	
여 수	여 수	50,253	25,583	24,168	24,168	-	100	
〃	삼일비축	4,162	3,442	3,442	3,442	-	100	
함 평	빛 그 린	2,225	1,608	-	-	-	-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A)	분 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일반산단	22개소	50,869	32,694	15,383	11,710	3,673	76.1	
목 포	삽 진	271	231	231	231	-	100	실수요자
여 수	오 천	222	131	131	131	-	100	
순 천	순 천	583	439	439	439	-	100	
나 주	문 평	323	250	250	250	-	100	
영 암	삼 호	2,971	2,427	2,427	2,427	-	100	
여 수	율 촌 1	9,193	5,850	5,850	4,790	1,060	82	
〃	율 촌 2	3,792	1,970	-	-	-	-	
순 천	해 룡	954	652	209	178	31	85.2	
나 주	나 주	549	417	417	332	85	79.6	
〃	미 래	2,954	2,026	-	-	-	-	
광 양	신 금	459	282	282	62	220	22.0	선분양
〃	익 신	478	350	-	-	-	-	
화 순	화 순	755	339	339	180	159	53.0	
진 도	군 내	685	532	532	532	-	100	실수요자
해 남	화 원	2,058	1,497	1,044	1,044	-	100	실수요자
장 성	나 노	902	605	-	-	-	-	
고 흥	도 양	2,758	1,814	-	-	-	-	
장 흥	해 당	2,920	2,136	2,136	906	1,230	42.4	선분양
강 진	성 전	1,484	962	-	-	-	-	
목 포	대 양	1,562	1,000	-	-	-	-	
영 광	대 마	1,641	1,096	1,096	208	888	19.0	선분양
신 안	압 해	13,355	7,688	-	-	-	-	

1-5. 산업단지 조성

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함평군 월야면 일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한 개발타당성 검토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4.08㎢(123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069억원을 투입, 생물·의약, 신소재, 광산업, 자동차 부품 등을 유치하는 계획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내생적·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주거용지 2.6%, 산업시설용지 63.2%, 지원시설용지 2.2%, 물류유통시설 1.0%, 공공시설용지 31%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조성 완료계획으로 있어 이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 11조 8,700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 7천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산단조성담당 최영학, 담당자 김삼수

나.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4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주)탑건설, (주)KCC건설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이행협정(MOA)를 체결하였고, 영광군과 민간개발업체, 금융권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 착공식에 앞서 지방 산업단지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약속하였다.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산업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세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일원 1,641천㎡(50만평)에 총 사업비 1,9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음료식품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1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에코넥스(전기자동차)를 비롯한 4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하였고 CT&T 등 4개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분양용지 1,096천㎡ 중 738천㎡(67%)에 대한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입주 희망기업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준공전 선분양이 완료될 예정이다.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4일 착공하여 2011년말까지 조성 완료계획이며, 도내 산업용지 공급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비교 우위를 갖춘 입지경쟁력을 확보하여 서북부권의 산업발전 신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산단조성담당 최영학, 담당자 조 준

다.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는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919,961.4㎡(약 88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약 2,26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북측에는 888천㎡규모의 체육시설용지(골프장)와 남측에 산업단지 2,032천㎡의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에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9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200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는 전라남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하여, 전라남도 중남부권의 지역산업의 기반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 40%,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 2.5%, 주택건설용지 0.6%, 공공시설용지 14.4%, 체육시설용지 24.2%로 구성되며 특히, 공원 및 녹지 비율을 18.3%로 법정 비율보다 훨

씬 높게 확보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산단조성담당 최영학, 담당자 정인화

1-6. 농공단지 현황

가. 농공단지 조성현황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09년 말 까지 21개 시·군 49개 단지(8,872천㎡)를 지정하여 42개 단지를 조성완료 하였고 7개 단지는 보상 및 조성 중에 있다.

규모는 165천㎡미만 31개소, 165천㎡이상~331천㎡미만 15개소, 331천㎡이상 3개소로 331천㎡미만이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중 가장 넓은 면적은 목포시 산정농공단지로 530천㎡이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이 4개 단지 1,004천㎡로 가장 넓고 가장 적은 면적은 진도군이 1개 단지 94천㎡이다.

2010년 말 보상 및 조성중인 7개 농공단지 중 6개 단지(무안청계 2, 보성 조성, 강진 칠량, 구례 용방, 나주 노안, 진도 군내)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1개 단지(영광 칠곡)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중에 있다.

신규 농공단지는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조선관련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장성, 담양 등 광주 인근지역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58>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2010. 12월말 기준)

구 분	소 계	'84~'93	'94~'97	'98~'05	'06~'07	2008	2009	2010
단지수	49	33	2	5	2	1	5	1
면적 (천㎡)	8,872	5,837	373	1,186	353	142	724	257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산단조성담당 최영학, 담당자 정인화

나. 분양현황

2010년 12월 현재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42개 단지의 분양률(조성중인 7개단지 제외)은 99%이며 4개 농공단지(화순 이양, 완도 완도, 완도 죽청, 진도 고군)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농공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농공단지 49개 단지 산업용지는 6,976천㎡로서, 분양대상면적 6,761천㎡중 6,260천㎡가 분양되어 전체분양률은 92.6%이고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21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59> 농공단지 분양 현황

(2009. 4분기 기준)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 양 현 황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대상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 단지	49개단지 8,872	42개단지 7,144	6,761	6,260	501	92.6	221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산단조성담당 최영학, 담당자 정인화

1-7.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

가. 자금지원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금난이므로 이의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리 4.79%(변동가능), 2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5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연리 4.79%(변동가능), 5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대체입주 촉진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촉진 및 장기 미분양부지의 분양촉진을 위해 도에 1개반 2명, 시군 20개반 40명 총 21개반 42명으로 구성된 휴·폐업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 촉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 도 농공단지 협의체 구성·운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협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행정기관 건의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 전담기구인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를 2004년 12월 2일 광역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결성하였다.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는 농공단지가 있는 20개 시군의 농공단지 협의회 대표 및 도 경제과학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 22명의 당연직 회원과 중진공, 전남TP, 대학교 등에서 6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총 28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공단지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산단조성담당 최영학, 담당자 정인화

1-8.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은 지정목적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도농 통합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에서 새로운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근 지역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위 3가지 유형 중 중앙정부의 집중지원이 보장되는 개발형태는 낙후지역형으로 지난 ‘09. 6. 12에는 정부의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정지원 및 국가지원사업으로 재분류되어 나주시 등 17개 시・군이 개발촉진지역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촉진지구＋도서종합개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1차년도에 신안・완도, 2차년도에 곡성・구례, 3차년도에 장흥・진도, 4차년도에 보성・영광, 5차년도에 화순・강진, 6차년도에 장성, 8차년도에 함평, 9차년도에 고흥지역이 연차적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3차~8차 지역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60>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대상지역	지 정 면 적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1차지구	신안・완도	180㎢	완도~신지, 암태~팔금연륙(연도)교 등 3개 사업	1996~2008	953
2차지구	곡성・구례	234㎢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 사업 등 12개 사업	1997~2008	3,411
3차지구	장흥・진도	210㎢	회진~용산간도로 개설 사업 등 23개 사업	1999~2008	3,627
4차지구	보성・영광	240㎢	금천~옥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 17개 사업	2002~2007	1,954
5차지구	화순・강진	238㎢	화순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4개 사업	2002~2010	2,761
6차지구	장성	78㎢	홍길동 테마파크등 20개 사업	2008~2017	6,926
9차지구	고흥	60㎢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2011~2019	12,806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함평군은 설계・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2011년 7월 신규로 지정된 고흥군은 2012년부터 설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의 감세혜택이 주어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촉진지구 내 중소기업 입주시 세제혜택 내용 〉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4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64조)

○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감면(지방세법 제277조)

앞으로 도 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설동진,
지역개발담당 최봉현, 담당자 형남준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2-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가. 벽지 및 오지·도서 교통지원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 벽지 및 오지·도서가 많고 농어촌버스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표 2-361> 연도별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 영 버 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정부예산	우리 도 예산	지원대수	지원노선수	손실보상금
2003	540	-	30	395	4,219
2004	360	-	20	407	4,300
2005	342	-	19	412	4,232
2006	339	-	22	428	6,332
2007	457	-	25	502	6,407
2008	543	-	30	530	8,408
2009	502	-	28	623	10,082
2010	539	-	30	685	11,533

이러한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확대 지원 하였으며, 이용객 감소로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송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벽지 및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교통정책담당 홍성일, 담당자 성미숙

나.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자동차 운송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9,0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의 운영비 900백만원을 보조하였다.

<표 2-362>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8,710	18,397	18,444	18,180	20,331	19,088
신규채용자	1,167	1,014	1,071	989	1,044	1,211
보 수 교 육	17,543	17,383	17,373	17,191	19,287	17,877

<표 2-363> 연도별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00	550	550	600	750	900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대중교통담당 김태형, 담당자 이병래

2-2. 교통체계관리 개선

우리 도의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은 저비용 투자로 단기적인 교통편익을 얻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교체・신설하고 있다.

2010년에는 신호기 945개소, 교통안전표지 2,277, 노면표지 1,148, 보행자신호등 112, 잔여시간 표시기 147개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51개소를 교체 신설하였다.

또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 306개소 등을 대폭 정비・확충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대중교통담당 김태형, 담당자 노주완

2-3. 선진 운송질서 확립

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9%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수는 497명에서 457명(8.8%)으로 감소하였다.

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매월 4일 도와 시・군, 경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군 반상회,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위반자 및 운전면허 응시자교육, 836개 초등학교에 대해, 녹색 어머니회 운영,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였다.

<표 2-364> 연도별 도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2010	10,991	457	18,627
2009	11,309	497	19,273
2008	10,468	483	17,953
2007	10,591	534	18,087
2006	10,497	508	17,949
2005	10,373	533	17,178
2004	10,923	579	17,967
2003	11,919	571	19,119

※ 2010년도는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 2.9% 감소, 사망자수는 8.8% 감소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대중교통담당 김태형, 담당자 노주완

나.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교통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공무원도 증원 시켰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 16,006건, 무면허 5,503건, 신호위반 72,356건, 과속 704,009건, 안전운전 3,815건, 안전띠 97,959건, 중앙선 침범 891건 등을 단속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송자섭,
대중교통담당 김태형, 담당자 노주완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3-1. 행복마을 조성

가. 추진배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상당수 노인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어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주택을 포함한 기초생활시설이 불량하거나 부족하여 도시민들은 물론 현 주민들 조차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인구 감소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전남 도내 빈집('10년 조사결과) : 8,425동(전체 농촌주택의 2.1%)
- 65세 이상 인구비율('10년말) : 18.3%(17개 시군은 20% 초과)

따라서 전남도는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방안

정주여건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은 한옥으로만 주택을 개량하고 상·하수도 설치, 주차장, 마을안길 확장 등 마을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여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민선 4기 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행복마을조성사업을 도정 주요시책사업으로 채택('06. 6월)하고 전국 최초로 행정혁신국 내에 행복마

을과('06. 8.28)를 신설하여 전남도 주요 시책사업인 행복마을조성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수, 전문가 등으로 「전략기획팀」을 가동하여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고 2007. 3월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6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2007. 9월에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그리고 행복마을내 한옥신축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2005. 12월 제정하였고, 한옥발전기금을 2011. 3월 현재 목표액 500억원중 299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한옥 보급 확산을 위해 2006. 4월 1억 8천만원을 들여 한옥시공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고「현대생활한옥 활성화 방안」세미나('09. 6/국회) 및 전문가 워크숍을 지금까지 16회 개최하였다.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아이템 발굴 및 행복마을 붐 조성을 위해 도지사, 목포대학교총장,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 등 주요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조성 국제심포지엄('07.11.2)을 개최했다.

한옥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목조건축전문학교(영암군 삼호읍 구 장전초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한옥시공기능자 및 한옥시공기술자 406명을 양성하였고, '09년도에 전남도립대학에 한옥문화산업과를 신설하여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고 41명이 재학중에 있다. 한옥건립후 안정적인 사후관리 보장과 한옥의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한옥시공 전문업체 지정제'를 도입하여 총 54개 업체를 지정하였다.

2007년에 최초로 무안 약실 등 5개소에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마을을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기존마을 정비형 12개소, 신규단지 조성형 12개소를, 2009년에 기존마을 정비형 22개소, 2010년에 기존마을 정비형 20개소 등 총 71개소의 행복마을을 지정하여 한옥 972동을 보급하였다.

또한 행복마을 소득사업을 민간 자율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2009

년 4월 사단법인 행복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한옥민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및 민박 예약·결재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2009년 7월 한옥 76동으로 한옥민박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1년 동안 18개 마을 138개 농가가 한옥민박을 실시하여 237백만원(호당 171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으며 19개 마을에서 메주, 버섯, 매실 등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여 1,763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라. 향후 추진계획

행복마을은 앞으로 한옥마을에 머물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도시의 편의성과 농촌의 쾌적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정주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며 나아가 환경과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고 고령화 사회와 에너지, 폐기물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테마형「뉴빌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행복마을담당 이덕부, 담당자 김희철

3-2.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 주택건설

우리 도의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65> 주택보급률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 구(수)	667,962	758,147	692,287	661,821	769,040	780,675
주 택(수)	671,339	721,486	733,214	748,450	751,807	773,720
보급률(%)	100.5	99.12	105.91	113.08	99.51	99.52

앞으로 도민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질적수준 향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건설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66>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 수	8,369	9,038	11,662	15,669	10,392	13,417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주택건축담당 김태식, 담당자 나승권

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16개 시군 129개 지구에 5,4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사업('01～'05)은 목포 등 5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53지구에 2,194억원을 투자하여 05년까지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 확

정된 2단계('05~'14)사업은 군 지역을 포함 16개 시·군 74지구에 3,2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9년까지 1,820억원을 투자하였고 '10년에는 651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도심미관 향상과 정비구역내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5,489억원의 개량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100,898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주택개량시 한옥주택건축을 널리 권장하고 있다.

<표 2-367>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까지		2011계획		2012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129지구	5,437	122지구	4,232	51지구 (49)지구	651	32지구 (32)지구	554
농어촌주택개량	100,898동	15,489	76,373동	11,463	1,000동	400	23,525동	3,626

※ ( )내는 연차사업에 따른 중복지구임

<표 2-368>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거환경개선	· 공공복지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노인정, 주차장 등 · 주택개량 : 주민자력개량(국민주택기금 융자) - 가구당 최고 4,00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 연리 3%
농어촌주택개량	· 최고 4,000만원 융자금지원 -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3% · 대출대상 주택 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 150㎡ 이하)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주택건축담당 이덕부, 담당자 임성수, 김태곤

3-3. 녹색농촌체험마을·전원마을 조성

가. 추진계획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 등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해 20개 시군 56개마을에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02년부터 '10년도까지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6개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10년도까지 총 5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퇴농장, 체재형 주말농원,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등의 수요자 취향에 맞춘 환경친화적 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표 2-369> 녹색농촌체험마을·전원마을 조성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95		665		130	
녹색농촌체험마을	71마을	142	56마을	112	15마을	30	
전원마을 조성	43마을	653	37마을	553	6마을	100	신규 6 계속 37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도시민유치담당 김영권, 담당자 정경선, 송명수

3-4. 권역단위 종합정비

가. 사업목적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은 인근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노령화된 인구만이 마을에 남게 되어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영어)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다. 사업대상지역

○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읍·면지역
○ 동일한 생활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라.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지역소득증대 : 공동저온창고, 공동선별시설, 소규모가공시설, 농산어촌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경관개선 : 지붕・담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비, 홍보컨설팅, 브랜드개발, 부대경비 등

마.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한도 : 권역 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차등지원
○ 사업기간 : 3년~5년(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

바. 추진성과

'04년('05년착수)부터 농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선택과 집중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1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1개권역이 선정되어 1,4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마을경관개선은 물론 지역소득증대 및 주민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사업 관련 지금까지 중앙평가결과 수상실적은 '07년 장흥 수문권역이 최우수상, '08년 강진 녹향월촌권역 최우수상, '10년도에는 구례 방광권역이 최우수상, 함평 모평권역과 완도 약산권역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아울러 매년 각 시군에서는 권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표 2-370> 권역단위 종합정비 추진실적

(단위 : 개권역)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선정권역	66	5	3	9	8	6	8	12	15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계획
사업비	2,110	56	113	142	264	445	465	625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 김윤영, 담당자 최강훈

3-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가.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기반을 확충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

나. 추진방향

농어촌 지역의 주민생활기반이 미흡한 마을 중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2011년부터는 사업대상이 일반농산어촌지역 21개시군 읍·면·동으로 변경되어 시군별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다. 추진성과

'90년부터 '10년까지는 95개 정주면 및 6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1조 925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및 위치 선정과 설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밀접한 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을 제공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명예감독관 위촉 및 통합감리 시행 등으로 시공·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표 2-371>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면, 억원)

구 분	계		'09~'10년까지		'11년 계획		비 고
	면수	사업비	면수	사업비	면수	사업비	
계	164	11,283	164	10,925	70	358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 김윤영, 담당자 신형욱

3-6. 소도읍 육성사업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상향식 공모제」를 채택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읍 지역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10년까지 31개 대상 읍 중 18개 읍을 선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2개읍을 완료하였다.

◇ 연도별 선정현황

- '03년 선정(4) : 화순읍, 장흥읍, 해남읍, 함평읍
- '04년 선정(4) : 남평읍, 구례읍, 무안읍, 완도읍

- ‘05년 선정(3) : 곡성읍, 벌교읍, 영암읍
- ‘06년 선정(1) : 담양읍
- ‘08년 선정(3) : 관산읍, 장성읍, 지도읍
- ‘09년 선정(1) : 진도읍
- ‘10년 선정(2) : 고흥군, 완도읍
- ‘11년 선정(6) : 돌산읍, 광양읍, 보성읍, 강진읍, 삼호읍, 영광읍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18개읍은 1읍당 국비 50억원과 도비 10.5억원(‘08년 이전 선정된 읍의 경우 국비 100억원, 도비 10.5억원)을 4년에 걸쳐 분할지원 되었으며, ’11년 신규사업부터는 1읍당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3년간 분할지원 24개읍 총사업비는 6,019억원으로 국비 1,344억원, 도비 140억원, 시군비 등 4,535억원이다.

2011년도에는 대상읍의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를 발굴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명소화를 추진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372>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전체계획		추 진 실 적						2011년 추진계획	
		계		2009까지		201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1읍	8,000	18읍	5,743	16읍	5,186	7읍	557	12읍	275

※ ’10년 7읍 중 5읍은 계속사업, 2읍은 신규사업, ’11년 6읍은 계속사업, ‘12년도에 신규사업 2개읍 선정예정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신명수,
행복마을담당 이덕부, 담당자 손근식

4. 재난재해 관리

4-1. 재난관리 종합체계 구축

가. 지역 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관리는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 및 긴급구조·구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협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재난과 관련이 있는 47개기관·단체의 장으로 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도지사)를 구성('04. 1. 1.)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장·군수)를 구성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재난의 효율적 관리

(1)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자연·인적재난 사고수습·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1개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구조·구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갖춘 92개 기관(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광역 지원협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효율

적인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체계를 보존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 및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 풍수해대책(방재과)
- ○ 설해대책(방재과)
- ○ 가뭄재난대책(방재과)
- ○ 지진재난대책(방재과)
- ○ 해일대책(방재과)
- ○ 항공재난대책(도로교통과)
- ○ 철도재난대책(도로교통과)
- ○ 도로재난대책(도로교통과)
- ○ 해상재난대책(해양항만과)
- ○ 방사능방재대책(정책기획관실)
- ○ 다중이용업시설 안전관리대책(방호구조과)
- ○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녹색에너지담당관실)
- ○ 폭발·대형화재대책(방호구조과)
- ○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행복마을과)
- ○ 통신재난대책(정보화담당관실)
- ○ 독극물·환경오염 사고대책(환경정책담당관실)
- ○ 산업재난대책(지역계획과)
- ○ 공연·행사장 안전대책(문화예술과)
- ○ 황사·폭염대책(방재과)
- ○ 지하도상가 안전대책(방재과)
- ○ 내수면 유·도선재난대책(방재과)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 녹색에너지담당관실
- ○ 정보통신(통신구) - 정보화담당관실
- ○ 교통수송(철도, 항공, 화물·대중교통, 도로, 항만)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 ○ 산업(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지역계획과, 기업유치과
- ○ 의료보건(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보건한방과, 축산정책과
- ○ 건설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시설) - 환경정책담당관실
- ○ 식·용수(식수, 용수) - 환경정책담당관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조성필, 담당자 노상철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가. 주요 위험시설물 지정, 관리 및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총 3,810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이중 시설등급이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3,797), D, E급은 재난위험시설(13)로 구분 지정하여 계절・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 안전점검과 위험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10년 1개소 17억, '11년 이후 13개소 198억)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속 전개

재난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위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소방 등 전문기술직 공무원과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적된 불안전시설은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보수・정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7,453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229개소 382건의 불안전 요인을 지적, 224개소 377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 5건에 대하여는 정비 중에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조성필, 담당자 배용길

4-3.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범도민 선진 안전의식 고취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등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 분야별로 총 4,192개 기관 39,335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케이블TV 자막방송,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나. 각종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설·추석명절, 봄 행락철,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전기·화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4회 재래시장, 고속도로 T/G 등 다중이용시설·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한 녹색전남'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락객 및 도민의 생활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시민안전봉사자 선정 위촉 운영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온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안전봉사자』를 선정 위촉하고, 또한 안전봉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제 상황과 접목한 재난안전 봉사활동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조기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민안전봉사자 위촉

○ 위촉현황 : 총 3,648명(시・군별 100～455명)

○ 구성원 분포 : 국민운동단체 510, 시민단체 330, 통・반장 1,026, 유관기관・단체 763, 전문기술자・종사자 215, 기타 804

라. 『권역별 순회 재난안전교육 및 포럼』 실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고흥 거금도 연도교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적・물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의 노후 가스・전기시설 정비, 재난피해에 따른 충격의 심리치료 및 자활지원 등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던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우리 도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안실련 등 전문기관 강사 3명을 초빙하여 공무원, 사업체 종사자, 도민 등 439명을 대상으로 연 3회 『권역별 순회 재난안전교육 및 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조성필, 담당자 황재필

4-4.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대책 등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운용

재해취약지구 사전정비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6,55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아이티 수도 인근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10. 1. 12.)하여 30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 방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지진방재 도상훈련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수습 체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라. 신속한 사전대비체계 구축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재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 상황 문자전광판 등 22개 시군에 17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198백만원을 투입 순천시 등 20개 시군의 노후 강우량기 20대를 교체하여 정확한 강우정보 확보를 통한 사전대비태세 강화 등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율방재역량 강화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도와 지역 군부대, 대한건설

기계협회에 이어 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주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인력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실시간 현장정보 확보를 위해 경남, 제주도 현지주민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광역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계곡 등 41개 지구를 선정지구 내 재해약자 대피를 현지 주민이 책임지는 E-30(30분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내 재해저감 시설에 대한 예찰과 응급복구 활동을 하게 되는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등 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방재복구담당 변재홍, 담당자 임광건

바. 재해 예방·복구기능 강화

(1) 추진성과

재해 발생 우려가 많았던 재해위험지구 158개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80지구에 3,189억원을 투입 59지구를 정비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나머지 99지구에 대하여는 2011년에는 30지구에 98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1,490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표 2-373>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단위 : 억원)

총 개 소 수		2010까지 정비		2011 정비		2012이후 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58	5,667	80	3,189	30	988	48	1,490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말목 및 포대류 등 수방자재 6종과 구호물자, 의약품 등 10종을 확보하여 시·군에 비축 중이며, 불도저 등 동원장비 2,402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복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회 등 849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국가관리 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개수하천의 개수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며, 효율적인 개수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도 투자를 늘려서 재해예방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방재복구담당 변재홍, 담당자 배덕수

4-5. 풍수해 피해 및 복구

가. 자연재해피해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46명(사망 42, 실종 4)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3,895억원으로 공공시설피해 8,178억원, 사유시설피해 5,717억원 이었다.

<표 2-374>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인 명(명)		이재민 (명)	공공시설 (개소)
	계	사유재산	공공시설	사 망	실 종		
합 계	1,389,506	571,735	817,771	42.0	4.0	15,796	16,504
평 균	138,951	57,174	81,777	4.2	0.4	1,580	1,650
2000	110,710	15,707	95,003	2.0	-.0	421	1,581
2001	6,629	5,504	1,125	1.0	-.0	1,704	51
2002	440,452	67,373	373,079	14.0	3.0	2,100	3,977
2003	278,483	175,196	103,287	11.0	1.0	4,563	3,843
2004	128,603	20,238	108,365	4.0	-.0	2,597	1,994
2005	249,150	244,358	4,792	4.0	-.0	2,435	142
2006	46,984	10,288	36,696	-.0	-.0	95	1,138
2007	73,451	19,981	53,470	3.0	-.0	243	2,264
2008	1,018	1,018	-	-.0	-.0	-	-
2009	54,026	12,072	41,954	3	-	1,638	1,514

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1) 이재민 구호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축되어 있는 구호 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구호를 실시하였고, 기 지정된 공동 수용시설이나 천막 등 임시 가건물에 질서 있게 수용하고, 취사도구와 유류 등을 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 실시

재해발생 시에는 기 편성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들이 보관중인 수방자재와 지정된 장비를 동원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9년 7월 호우 피해 발생 시에는 186천명의 복구인력과 2,839대의 복구 장비 동원, 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 복구단가 인상지원은 물론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항구적인 개선복구 추진

재해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조치하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 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375> 최근 10년간 복구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피해액	복구비 지원						
		계	중앙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의연금			
합계	1,389,516	2,342,449	1,546,330	1,500,035	8,992	412,884	323,923	59,009
평균	138,952	234,245	154,633	150,004	899	41,288	32,392	5,901
2000	110,710	287,094	214,836	213,429	1,407	49,160	17,010	6,088
2001	6,629	15,614	7,078	6,816	262	2,741	4,147	1,648
2002	440,452	800,985	596,945	591,385	5,560	141,685	56,943	5,412
2003	278,483	352,544	230,464	228,731	1,733	51,255	64,613	6,212
2004	128,603	218,540	159,733	159,733		37,616	14,680	6,511
2005	249,160	331,277	104,234	104,204	30	27,375	166,530	33,138
2006	46,984	66,641	37,325	37,325	-	29,316	-	-
2007	73,451	143,914	107,481	107,481	-	36,433	-	-
2008	1,018	-	-	-	-	-	-	-
2009	54,026	125,840	88,234	50,931	-	37,303	-	-

다. 추진 성과

최근 10년간 호우, 폭풍,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인명 피해 4.6명, 재산피해 1,39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10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도·시·군 재해대책본부와 유관기관이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방재복구담당 변재홍, 담당자 임광건

4-6.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연장은 총 3,232.1㎞로 국가하천이 328㎞, 지방하천이 2,904.1㎞이다.

<표 2-376> 하 천 현 황

구 분	하천연장 (㎞)	요개수 연장(㎞)	2010까지 개수		장 래 (㎞)	관리주체
			㎞	%		
계	3,232.1	3,622.4	2,850.0	78.7	772.3	
국 가 하 천	328.0	345.9	341.4	98.7	4.5	국토해양부
지 방 하 천	2,904.1	3,276.5	2,508.6	76.6	767.8	전라남도

하천정비는 요개수연장 3,622.4㎞중 지금까지 2,805㎞를 정비하여 7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하천은 요개수연장 345.9㎞중 341.4㎞(98.7%), 지방하천은 3,276.5㎞중 2,508.6㎞(76.6%)를 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 자연친화적인 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천변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레저·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수해 상습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하천담당 김장환, 담당자 임오중

4-7.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전시설을 발견하고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불안전 시설을 무상점검 한 후 보수방법 및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재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청방법 및 점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건축물, 옹벽, 민간·공공시설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사와 관련된 법적분쟁시설, 민원이 발생된 시설은 제외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양식 및 인터넷, 전화로 청구하면 해당 시·군에서 우리 도로 청구하게 된다.

도에서는 건축, 토목, 등 각 분야별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도 방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철근 탐지기 등 안전점검 장비 13종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다. 추진 실적

2009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연구소 등 14건, 2010년도 11건의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 보수방법 등 해소방안을 제공하였고 또한 점검한 시설에 대해여는 해소 시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조성필, 담당자 임현미

5.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지행정 구현

5-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열람 제공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조사 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 시 건전한 가격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지가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 소관주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그 결과 조사 인력 및 재정의 낭비는 물론,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결과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공적 지가에 대한 혼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토지공개념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보다 체계화된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한 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다시 또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12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비과세 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도 전체토지의 73%에 해당한다.

또 구조적으로 양면성을 띠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개최,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 운영, 위성영상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가조사 등 전라남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실거래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지가에 대하여는 현실화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가조사에 만전을 다하였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토지관리담당 윤영진, 담당자 김승채

5-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기업도시, 특성화산단 등 대규모 국·도정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 거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처리 하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토지의 위장 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남경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해제(또는 축소)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77>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표 2-378>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2010. 12. 31.현재)

지 역		면적(㎢)	지 정 기 간	지 정 사 유	비 고 (지정자)
합 계		332.46	도 전체면적(12,232)의 2.7%	15개 시군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0.4	'09.12.03~'14.12.02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도지사
여수시	경호동(1개동)	3.1	'07.09.25~'12.09.24(5년)	경도종합개발 사업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선월리 중 경제자유구역안의 지역(3개리)	4.8	'08.04.01~'11.03.31(3년)	광양만권 신대 배후단지 조성	광양경제청장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부	3.8	'09.07.08~'11.07.07	2013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개최	도지사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1개동, 3개리)	10.03	'08.04.09~'10.04.08(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나주시	개발제한구역(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부)	39.6	'09.05.31~'10.05.30(1년)	개발제한구역 투기방지	국토부장 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1개리)	3.06	'05.09.10~'10.09.09(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	광양경제청장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두정리(3개리)	5.4	'08.09.01~'11.08.31(3년)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표 2-379>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지 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 고 (지정자)
곡성군	곡성읍 신기·학정·장선·읍내리(4개리)	19.6	'08.11.10~'11.11.09(3년)	곡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3개리)	8.1	'10.06.18~'12.06.17(2년)	고흥조선타운 개발	도지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1개리)	4.8	'10.06.18~'12.06.17(2년)	남열리조트 개발	도지사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1개리)	8.7	'08.11.10~'11.11.09(3년)	보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장흥군	회진면 덕산·대리(2개리)	5.1	'08.11.25~'11.11.24(3년)	회진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성전면 명산·송학리(2개리)	8.7	'08.06.18~'11.06.17(3년)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해남군	산이면 대진, 덕송, 구성, 상공, 부동, 금호리(6개리)	43.8	'09.08.21~'11.08.20(2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도지사
무안군	무안읍, 청계·망운·운남·현경면(5개읍면)	97.6	'09.03.1~'12.02.29(3년)	기업도시 건설	도지사
함평군	함평군 월야면 영월, 외치, 월야, 월악리	13.5	'08.06.18~'11.06.17(3년)	공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신안군	압해면(11개리) ※ 고이·매화리 제외	52.4	'08.10.27~'13.10.26(5년)	신안조선타운 건설 등	도지사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토지관리 담당 윤영진, 담당자 김양선

5-3.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만 있었을 뿐, 부

동산개발로 인한 관리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육성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2-380> 등록대상 규모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연면적2천㎡ (연간5천㎡)이상	2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천㎡(연간1만㎡) 이상

<표 2-381>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 설		실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면 가능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는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사무실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30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표 2-382>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2011. 3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신규	폐업, 이전, 취소	비 고
업체수	33	44	11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토지관리담당 윤영진, 담당자 최복자

5-4. 정확한 토지등록 관리

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하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지적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해서 도내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60,812점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6,837점을 신설하였으나, 이중 5,000점을 도내 마을단위마다 1내지 2점을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관련 구획정리, 경지정리 등의 사업에 의한 확정측량 27개 지구 1,128ha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 등록하였으며 종전에는 토지의 경계를 수작업에 의하여 등록공시 하였으나 현재는 수치화된 경계를 좌표에 의거 등록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청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345천 필지를 정확히 등록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157천필에 대하여 등기를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6,280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첨단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한편, 그동안 지방의 열악했던 공간정보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토지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토지박람회에서는 전라남도 주요 프로젝트 개발사업은 물론 우수한 투자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라남도 투자비전관』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공간정보 구축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수 공간정보 전시관도 함께 운영 했으며,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등 53필지 40만㎡의 국·공유지 투자적지를 발굴하여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전시했다.

전시자료는 토지분야 직원들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등 관련 담당자를 연구팀원으로 구성하여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전체 국공유지를 조사한 후 정밀 입지분석을 통해 투자 유망지를 발굴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옥남

5-5. 국토종합정보센터 운영

토지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토지정보 수요기관의 각종 토지정책 수립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적, 주민자료, 공시지가자료 등을 연계 통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정보센터는 1994년 당시 행정자치부에 중앙서버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도는 1996년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좀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 창출요구에 맞추어 2001년 11월 시·군까지 온라인을 개통하였다.

도내 토지정보 12,247㎢ 5,641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변동과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등 총 804천여 필지의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한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46,017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59,214필지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유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 각종세금 체납자, 벌금·과징금 부과자 등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 자료 276,074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425,124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상 땅을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684명이 신청하고 6,043필지의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시·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거쳐 115천장의 지적(임야)도 DB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현재 전산 민원발급 처리 중에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분할측량 등 측량민원으로 인한 지적측량 결과도를 DB구축하여 향후 사전 민원예방 및 도민 재산권보호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창일

5-6.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측량업 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0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측량업의 업무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전남도내 측량업등록은 총 13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 2-383>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구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업체수	130	42	88	

측량업의 등록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여부, 장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임원 및 기술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수현

5-7.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활성 및 토지정보의 정착화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토지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부동산중개업 정보, 바뀐지번 찾기 등 총 9개종의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안방에서도 간단히

민원신청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 인터넷서비스 내용 중 주목할 점이 토지이용계획 열람/발급 1,011천건, 개별 공시지가 249천건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정보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고 갈수록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꾀하고 보다나은 대국민 인터넷 안방서비스를 할 수 있어 양질의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시스템과 연계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여 개별필지의 공시가격,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가격정보와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열람 등의 각종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조치영

5-8. 도로명주소 사업

현행 주소체계는 일제강점기부터 부여된 토지 지번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과 도시팽창 및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나열됨으로써 우편배달, 방문 등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물류비용 증가와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중심의 "새로운 주소변경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근거법률인『도로명주소법』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착수하였다.

시군별 사업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목포, 광양시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도까지 전 시군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우리 도의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량은 도로구간 13천개소에 대해 도로명판 23천개, 건물번호판 513천개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 상황 등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 하였다.

2011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고시를 마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되었다.

2011년 하반기 부터는 각종 계약이나 거래 등 법률관계 설정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1,095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의 표기도 바꿔야 한다.

또 일시에 새 주소로 전환할 경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의 지번주소와 새 주소를 함께 사용토록 하고, 모든 공적장부 정리가 마무리 되는 2014년부터는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포스터나 팸플릿, 홍보영상물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전

국 단위 공중파 방송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새주소 안내지도도 대량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3,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내용을 싣는 한편, 각 세대별로 통장과 이장을 통해 자신의 새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세대별 방문 및 우편물을 통해 자세히 알리고 있다.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비용 절감과 위치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은 단순히 지번주소의 문제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생활양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심재홍

5-9. 공간정보화사업

지표면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5월 18일 GIS업무를 전담

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하고 2005년 12월 “전라남도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중앙부처와 타 시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일명 KOPSS)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발굴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회를 통해 보다 완벽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언과 자문을 받았다.

첨단 공간정보기술에 관한 학술발표와 정보교류를 통해 도내 공간정보화사업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라남도 GIS 컨퍼런스』를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9월 15일을 “지리정보의 날”로 지정 『제1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2007년 9월 14일 『제2회 풍요로운 전남건설과 GIS 꿈』, 2008년 10월 15일 『제3회 GIS와 함께하는 투자의 땅 전남』, 2009년 10월 27일 『제4회 하늘!땅!바다! 공간정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010년 11월 3일 『제5회 Smart 공간정보 Happy 녹색전남』을 개최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자체 개발한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 참석자에게 선보였으며, 2010년에는 투자유치브리핑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본 시스템들은 투자예정지에 대한 각종 고시사항, 환경규제 사항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 도정의 운명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에 일층 탄력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공간정보의 날 행사등을 통해 GIS 공감대 형성과 산·학·관 및 민간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분류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이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완공되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아름다운 영상을 활용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2004년 12월~2006년 8월) 완료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섬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 구축하고 통합위성영상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우리 도내 섬들의 관광자원화와 휴양레저 투자유치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내부뿐만 아니라 남도의 현장감 있는 천혜의 영상을 전국에 알리고자 위성영상 참여마당 시스템(2006년)을 구축,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하루 평균 2,000~2,500명의 주민들이 찾는 인기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이 GIS를 기반으로 구축한 각종 시스템은 대규모 개발 입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효과적인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간척지 또는 해변가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관광지 접근경로의 3차원 입체검색과 기타 도로, 산림, 재난재해 위기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박현섭

5-10.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정부에서는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리정보 DB화하여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여수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2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시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6,969㎞를 현장조사·탐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파일화 하였고,

앞으로 무안군을 시작으로 모든 군 지역까지 사업을 확산하여 2015년까지 196억원을 투입하여 3,728㎞의 지하시설물을 정보화 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로 도로상의 시설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 매설물 설치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의 공동활용에 따른 난개발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홍성일,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박원선

6. 영산강 살리기 추진

6-1. 기본현황

한반도 남서부 전라남·북도에 위치(동경 126°26‘12“～127°06’07”, 북위 34°40‘16“～35°29’01”)한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의 추월산 자락인 가막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드넓은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를 유장하게 흘러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 남해로 유입된다.

영산강 유역의 평균경사는 19.5%로서 비교적 완만하고,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영산강의 중상류부에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의 도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전체 유역면적 3,455㎢중 임야와 농경지가 각각 1,749㎢와 1,161㎢로 전체 유역면적의 85%, 도시지역이 242㎢로 7%를 차지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등 1개 광역시, 2개 도, 3개시, 7개군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역내 인구는 총 1,779,417명으로 남자가 886,344명, 여자가 893,073명으로 여자가 6,729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2,456가구(가구당 약 3명)가 거주하고 있다.

<표 2-384> 영산강 주요현황

하 천	하천등급	유역면적 A(㎢)	유로연장 L(㎞)	하천연장 (㎞)	유역평균폭 A/L(㎞)	형상계수 A/L^2
영 산 강	국가	3,455	129.5	111.7	26.7	0.206

※ 자료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2. 사업개요

옛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2000여년이 넘는 동안 남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문화의 산증인이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영산강이 그 동안 침전물과 각종 폐수 등으로 수질이 심하게 오염(BOD 평균 3~5급수)되었고,

하천바닥에 높게 쌓인 퇴적토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매년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피해의 수해가 발생되었다.

<표 2-385> 영산강유역 풍수해현황(1998~2007)

구 분	사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피해액 (억원)
영산강 유역	18	8,903	26,550	5,042

※ 자료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에 오염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길을 정비하여 홍수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가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6-3. 추진성과

2004년 영산강 살리기 구상에 이어 2006년 6월에는 "영산강 프로젝트 TF팀"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영산강 수질개선 공동 노력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영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안"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사업 외에 친수공간 조성, 역사·문화 복원 등을 포함한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008년 1월 영산강 살리기 구상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정부계획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2008년 12월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대상 살리기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4급을 단장으로 한 총 9명의 인원으로 영산강사업지원단을 발족(2009.2)함으로써, 영산강 살리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3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개 사업에 9조 1,212억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국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약 2조 7천억원의 사업비(본사업비)를 확보하였다.

<표 2-386> 영산강 살리기 사업내역(본사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억원)		-	26,461	
국토부	소 계		13,583	
	하도정비(준설)	0.3억㎥	2,184	
	보	2개소	1,835	
	생태하천 조성	130km	2,792	
	제방보강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자전거 도로	220km	209	
	기 타	-	2,166	
농림부	소 계		13,866	
	농업용 저수지	23개소	6,206	
	영산강 하구둑	1식	6,189	
환경부	수질대책	24개소	483	

이는 유역면적당(㎢) 사업비로는 4대강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이며, 하천연장당(㎞) 사업비로도 낙동강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2-387> 4대강 사업비 비교

구 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A. 사업비(억원)	20,435	24,875	97,875	**26,461**
B. 유역면적(㎢)	25,954	9,912	23,384	**3,468**
C. 하천연장(㎞)	494	395	506	**138**
유역면적당 사업비(A/B)	0.79	2.51	4.19	**7.63**
하천연장당 사업비(A/C)	41.4	63.0	193.4	**191.7**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09.6.8)이후 세부사업내용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2009년말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착공되었다.

사업착공이후 유관기관간 상호협력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2010년말 공정목표를 초과달성(110%)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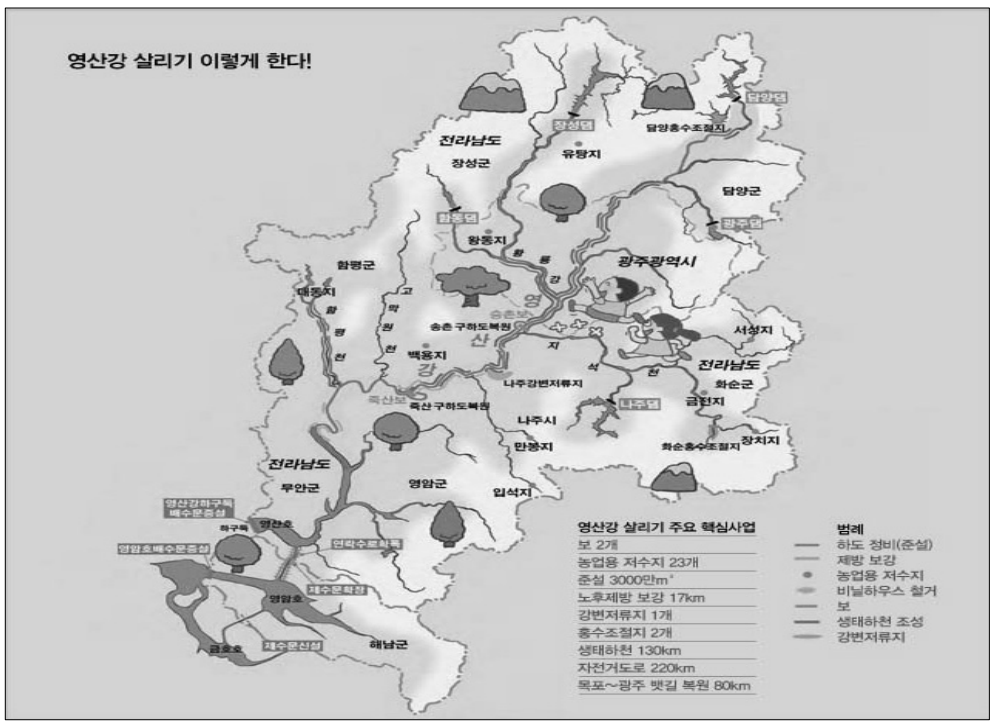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하천정비사업과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지 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환경부(시·군)의 수질개선사업 등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언론 인터뷰·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제작·배포 등)와 아울러 지역주민·민간단체·학생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현장체험 행사(영산강 뱃길탐사, 강살리기 순회 사진전 등) 등을 통하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

6-4. 앞으로 계획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성과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와 지지기반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방어와 수량확보, 수질·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완료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등과 연계한 영산강 활용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건설방재국 영산강사업지원단장 김명우,
기획홍보담당 고병주, 담당자 이종연

7. 공동혁신도시건설

7-1.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지역 일원
○ 면　　적 : 7,327천㎡(2만가구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
○ 사 업 비 : 1조 4,175억원(조성비 9,676 보상비 4,499)
○ 이전기관 : 한국전력 등 16개 기관(해양경찰학교 여수시 개별이전)
○ 사업시행 : 공영개발(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과밀해소, 일극 중심의 국토개선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주고, 국토 공간의 재편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조화된 개성 있는 성장거점 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하였다.

다. 기본구상 내용

（1）혁신도시 개발 컨셉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 Green-Energypia"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혁신지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지원 테크노파크, 대학 R&D를

연관 배치했다.

혁신클러스터와 배후 주거벨트 조성으로 용도별 기능간 연계를 강화하여 상업기능의 선형배치를 통한 교류공간 조성 및 도시의 활력을 형성한다.

특히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배메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속의 푸른 생태공원을 조성, 녹지네트워크화 하였고 저수지, 중앙호수공원, 실개울을 잇는 수류순환망을 구축하여 빛가람도시만의 차별화된 특화도시를 컨셉으로 하였다.

(2) 혁신도시 미래상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한다.

라. 향후 추진계획

기본구상을 토대로 행정구역 경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형, 지세 등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4대 특화도시(Blue·Green·Human·Culture network) 및 신·재생에너지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명품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지원팀장 남두식, 담당자 최순희

7-2. 혁신도시건설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 내용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입지선정에서 보상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7년 11월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는 총 7,327천㎡를 9개 공구로 나누어 LH공사(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개(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상생발전의 역사적 기틀을 만들었으며 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는 15개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도시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두 광역단체의 상생발전과 협력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디지털콘텐츠사업단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서울에 잔류할 계획이었다.

또한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국제통신협력진흥원 3개 기관이 통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초 충북 진천으로 이전할 계획

이었으나,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2개 기관이 전남으로 입지가 결정되도록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선 결과 2개 기관을 포함한 16개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이 확정되어 2010년 5월 24일 이전계획을 최종승인 받아 15개 기관은 나주혁신도시로, 해양경찰학교는 여수시로 개별 이전하게 되었다.

현재 전남으로 이전하게 될 이전기관 중 12개 기관에서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 발주를 한 상태이다.

※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 발주 등 현황

구 분	계	이 전 기 관 명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	12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건축허가	1	우정사업정보센터('10. 11. 4)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11월 4일 건축허가가 완료된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해양경찰학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등이 청사 착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이 가시화 되며, 하반기에는 모든 기관에서 부지매입 및 청사 설계발주가 이루어진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건립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게 하여 지역건설업체가 4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 기획재정부 고시개정(2010. 12. 6.)

아울러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이 함께 나주로 이전토록 이전기관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로 전파연구소의 녹색방송통신진흥센터, 한국전력의 통합데이터센터, 한전KPS의 R&D Complex 등이 동반 이전하게 된다.

다. 기반시설 추진상황

(1) 부지조성 공사 추진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 광역교통계획(진입도로) 공사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진입도로)은 총 4개 노선 8.13㎞로 사업비 2,029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2개 노선 총 6.75㎞ 중 1개 노선 5.86㎞(나주역~혁신도시)는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배수공, 제2나주대교 하부공사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1개 노선 0.89㎞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중에 있다. 또한 시행사 구간인 2개 노선 1.38㎞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

광역교통계획은 호남광역권내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혁신도시의 역할 및 기능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장시킴으로써 혁신도시가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써 성장하도록 주도할 것이다.

(3) 상·하수도 공사 추진

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공사는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배수지 신설 및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추진 중이며 하수처리 및 오수펌프장 시설은 201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 향후 추진계획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1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시설지원팀장 김광현, 담당자 박성훈

7-3.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행정지원

가. 이전기관 및 임직원 이전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착 및 혁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전지원계획 수립내용은 이전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전비용·주거안정 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 산·학·연 유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이전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혁신도시 원주민 지원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개정('08. 1. 18.)으로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은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업체 및 이전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이주민의 직업전환훈련 희망자를 분야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조경, 중장비 등 5개 과정, 19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 이주민의 재취업을 도왔다.

아울러, 원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사단법인 "빛가람"을 설립하여 혁신도시 조성지역 내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이장 등에 참여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 남도문화탐방 실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해양경찰학교 포함)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남도문화탐방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했다.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883명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초청하여 천연염색문화 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명승 · 유적지 답사,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했다.

이러한 탐방행사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일체감 형성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조속한 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지원팀장 남두식
T/F팀장 김옥남, 담당자 임성국

7-4. 혁신도시 자족형교육거점 구축

가. 추진배경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혁신도시를 광주·전남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건설 초기단계부터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간 교육비전을 공유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우수교육여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나. 추진방향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2년까지 선도적 우수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거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투자계획을 기관간 공유함으로써 각 사업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참여기관은 해당분야별로 지원·협력 역할을 부여한다.

다. 사업내용

(1) 추진체계 구축

전라남도는 5개분야 17개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사업의 총괄과 교육기관간 교육발전 협약 체결, 교육협력을 위한 광역교육협력협의체 구성, 2020년까지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2) 2012년까지 선도교육환경 구축사업 추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12년까지 선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초기 교육자본 집중투자여건마련 4개 사업, 광주·전남간의 미래교육상생협력방안마련 3개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우수교육시설 유치 4개 사업, 기타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주관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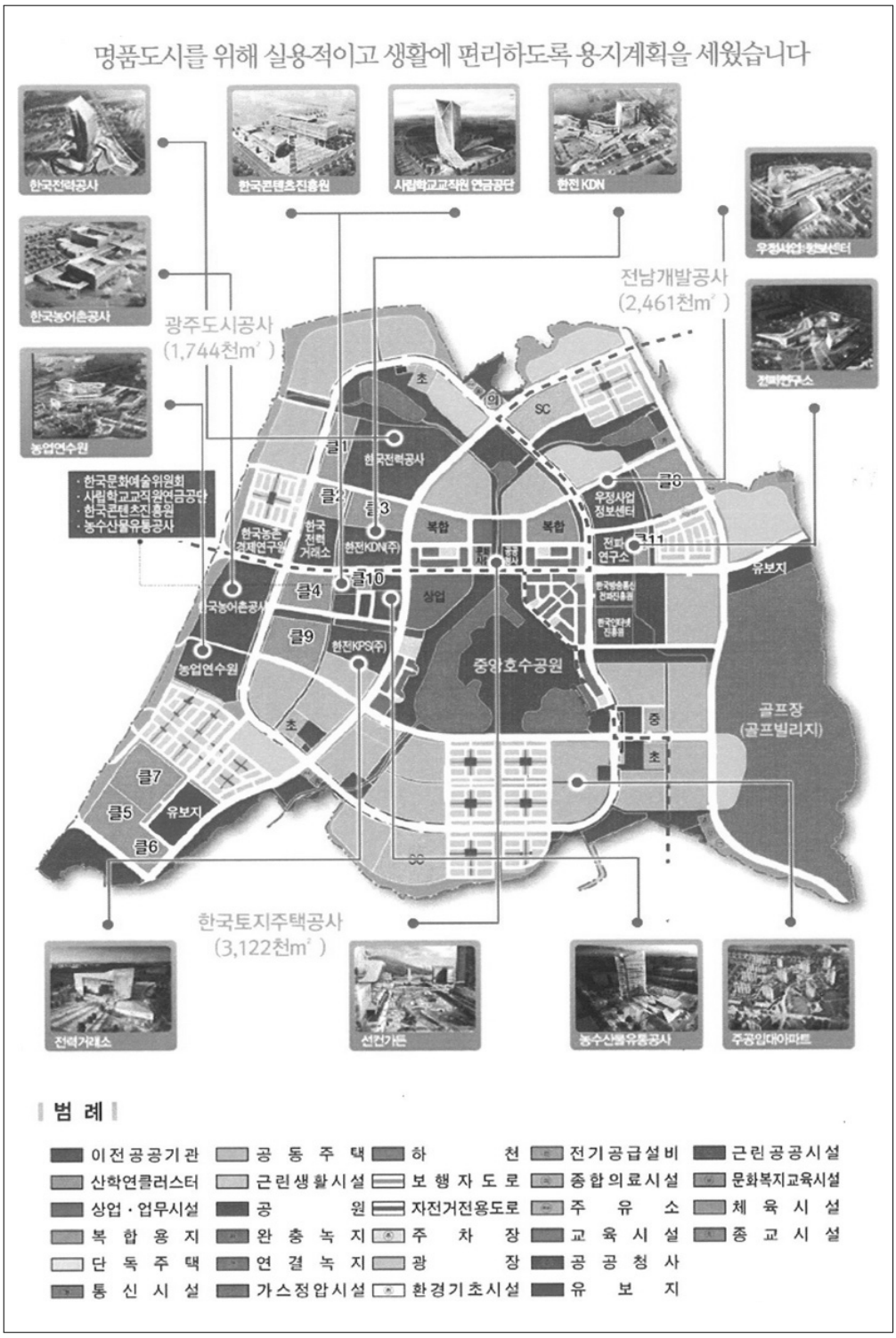
※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을 위한 5개분야 사업내용
-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사업 총괄
-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을 위한 교육발전 협약체결
- 교육협력을 위한 광역교육협력협의체 구성·운영
-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을 위한 청사진 마련
- 선도교육 환경 구축사업

라. 앞으로 추진계획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자족형 교육거점 구축을 위한 5개분야 17개 사업을 완료하고 교육분야 중장기 사업계획에 맞춰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지원팀장 남두식
T/F팀장 김옥남, 담당자 김은경


명품도시를 위해 실용적이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용지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한전 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2,461천㎡)
광주도시공사
(1,744천㎡)
정책연구소
농업연수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초
의
SC
클1
한국전력공사
클2
클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
복합
복합
우정사업정보센터
클8
전파연구소
클11
유보지
클4
클10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클9
한전KPS(주)
농업연수원
중앙호수공원
골프장
(골프빌리지)
중
초
클7
클5
유보지
클6
한국토지주택공사
(3,122천㎡)
전력거래소
선건가든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공임대아파트
범 례
이전공공기관
산학연클러스터
상업·업무시설
복합용지
단독주택
통신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가스정압시설
하천
보행자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장
광장
환경기초시설
전기공급설비
종합의료시설
주유소
교육시설
공공청사
유보지
근린공공시설
문화복지교육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